# 第289回國會 (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1 號
## (임 시 회 의 록)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4月9日(金)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청회 개최의 건
3. 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6.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7.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審査된案件**


3. 현안보고 ····· 3
   가. 외교통상부 소관
1.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 ····· 8
2. 공청회 개최의 건 ····· 8
3. 현안보고(계속) ····· 8
   가. 외교통상부 소관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손숙미・임두성・유기준・김춘진・이한성・안홍준・유재중・유성엽・김성수・김성태・이애주・손범규・김정훈・심재철 의원 발의) ····· 38
5.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 38
6.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38
7.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8


(10시55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밤에 우리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종되셨고 또 희생되신 분들로 인해서 국민적인 슬픔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한주호 준위, 고 남기훈 상사, 고 김태석 상사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아울러서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사고의 수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천안함의 인양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과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외교통상부의 현안보고와 법률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하는 것이 순서겠습니다마는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의 현안보고를 먼저 시작하고 중간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의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참석차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부득이 오늘 위원회를 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지요.

**○구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는 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이 상임위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국회법 제128조에 의하면 말이지요, 국회의원 자료요청에 외교부는 성실히,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 때문에 2010년 이후의 외교통상부와 주일대사관의 공문 수·발신 내역과 그 내용을 지난 30일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답신이 왔느냐 하면요, "우리의 협상 결과, 외국의 동향 등 비밀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비밀 요청 및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회는 행정부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문 수·발신 목록의 경우는요 이게 비밀 문건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 수·발신 목록을 비밀 문건으로 분류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발신 목록의 경우 일본의 역사교과서 관련한 주일대사관과 외교부의 자세나 능력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의 경우에 대부분은 비밀문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공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공개하지 못하겠다'……

또 설령 비밀문서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2급 비밀문서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자료요청을 전부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입니다.

혹시 뭐 외교부에서 감추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일본 독도 사항과 관련해서?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정부가 무슨 감출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또 외교부로서는 외교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록을 전체를 제출하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거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외교 관리관 여러분?

제가 과대하고 포괄적인 목록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2010년 이후, 그래 봐야 3~4개월의 주일대사관의 공문 수·발신 내역, 기껏해야 50건~100건입니다. 그것 내 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내주고 말이지요.

내가 또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독도 사건 이후

의 수·발신 내역을 달라고 그랬으면…… 제가 확인해 봤는데 13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못 내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이것 조치해서 오늘 중으로 다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구상찬 위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외교통상부에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에게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현안보고

#### 가. 외교통상부 소관

(11시03분)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유명환 장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통상부에서는 소관 현안 중에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외국민 보호 그리고 독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현재 한미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안보리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6자회담 재개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장관급 외교 전략대화에서 저와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의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여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소위 투 트랙 어프로치(Two-Track Approach)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해서 관련국들과 협의를 통해 일괄타결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또한 저는 지난 3월 18일 북경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또한 회담에서는 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측은 일괄타결방안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중 양측은 향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한편, 이와 동시에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현행 대응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도 양자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회담 재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하에서 향후 협상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하여 일괄타결방안의 구체 내용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5자 간의 협의를 더욱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부터 국내외 언론들이 김 위원장의 방중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 외교당국은 최근까지 이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연간 1000만여 명의 우리 국민이 출국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활동범위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 수요 역시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제법 준수, 유사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유지 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외국민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외국민 보호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호드림호 피랍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 5명이 승선한 삼호드림호는 우리 시각으로 4월 4일 16시 10분경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습니다. 삼호드림호에는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피랍 지점은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인 아덴만 해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0㎞ 떨어진 해역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월 5일 새벽 1시경 청해부대의 충무공이순신함을 피랍 발생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였습니다.

삼호드림호는 4월 7일 수요일 저녁 8시 10분경 소말리아 호비호항에 입항하였고, 청해부대는 12마일 영해 인근 수역에서 감시 활동 중이며, 우리 국민을 포함한 승선 전원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취한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피랍 인지 즉시 본부에 삼호드림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 케냐대사관에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피랍 발생 직후 19시 30분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현재는 외교부 내에 삼호드림호 피랍대책 정부합동 상황실을 가동하여 24시간 신속한 상황의 전파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불란서 등 주요 우방국에 피랍 사실을 통보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피랍 선원의 안전한 구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무공이순신함의 작전지역 이탈에 따른 우리 선박의 호송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국과 협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랍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석방을 위해서 납치단체와 선사 간의 협상 시 관련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등 측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 유학생 피습 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올 초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2월 15일에는 시베리아 알타이주에서 강모 씨가 괴한들에게 피습·사망하였으며, 3월 7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심모 씨가 괴한의 칼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건강이 호전되어 지난 27일에는 일시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대사 및 러시아 관계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였고, 또한 신각수 제1차관이 3월 29일 러시아 방문 시에도 러시아 측에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책의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에게는 최대한의 영사 조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 여행경보 1단계를 신규 지정하는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아공 월드컵 대비 안전대책입니다.

남아공은 강력 범죄 발생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근에는 인종 갈등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속출하는 등 치안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남아공 당국에서 일반 여행객에 대한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관광객의 안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남아공의 여행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측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 남아공 안전대책본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남아공에서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선경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 영사 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외교부는 해외 안전여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영사 인력과 예산을 좀더 확충해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지법 위반자 제재 관련 여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반 법제 정비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 독도 관련 그간의 조치 실적, 그리고 향후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및 평가에 대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총 5개 사회교과서 모두가 지도상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중 1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번 검정 결과는 2008년에 기 발표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에 따라서 일본 정부와 민간 출판사가 독도 관련 기술을 실은 것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역사 문제가 아닌 영토 문제로 접근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 교과서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검정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 외무성에 대한 항의 구상서 수교 등 조치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이의 시정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일본 외교청서 독도 관련 기술과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된 2010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하에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구상서를 수교하고 강력한 항의의 표명과 함께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독도 관련 조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내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국내외의 독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2008년 7월 외교부 내에 독도기획단을 구성하여 제1차관의 주재로 독도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부-재외공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서 재외공관 내 독도담당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독도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리실 내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통해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독도연구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국내외에 좀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외교부 홈페이지상에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을 10개 언어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자의 친화성 제고를 위해 동 기본 입장에 언급된 주요 관찬자료를 자료 원문 사이트에 링크하였으며, 네이버 및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 동 기본 입장을 링크함으로써 외교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바 있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더욱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외교부의 청소년 웹 사이트상에 독도 플래시(Flash) 홍보 동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홍보 팸플릿, 독도 표기 세계지도 등을 재외공관을 통해서 해외에 수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망을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계지도상의 1500여 건의 독도표기 현황을 조사해 왔으며, 독도 표기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 실효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과 같이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더욱더 공고화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울릉도 내 독도 생태 교육센터와 독도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총리실 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독도영유권 강화, 환경영향, 문화재적 가치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도 관련 신규사업을 관련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또한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통한 독도영유권 공고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먼저 독도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해 독도 관련 고지도, 고문헌 등 사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국제법 논리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독도가 국제분쟁 지역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예, 송영선입니다.

장관님, 이번 초계함 사건 진상조사단에 미국·영국·호주·스웨덴 전문가가 포함이 됐는데 왜 일본은 포함이 안 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

**○송영선 위원** 일본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앞바다에 약 5000개의 기뢰를 북한이 심어 놓은 것을 실제로 맥아더 장군 인천상륙작전 하기 위해서 기뢰를 소거한 게 일본의 26척의 소해정과 소해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일본은 안 불렀어요. 일본이 세계 최고의 천해(얕은 바다)의 소해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일본을 안 불렀습니다.

사건 즉시부터 저는 일본 소해함과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교과서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서 일본 자체도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 한반도에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서둘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또 진상조사단에 중국과 러시아도 안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어뢰·기뢰·반잠수정, 1950년부터 기술이 전부 중국과 러시아에서 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한 지형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아는 게 중국입니다. 안 불렀습니다. 저쪽에서도 일체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 자체가 지금 동북아의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칫하면 손과 혀만 데고, 먹을 게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6자회담 할 생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송영선 위원** 그러니까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그건 뭐 다 아는 것이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해야 되겠지요.

**○송영선 위원** 6자회담을 하시려면 6자회담의 핵심국이고, 지금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줄 사람들을, 국가들을 하나도 안 불렀어요. 안 부르면서도 또 6자회담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스웨덴이 심해 기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영국·호주가 어떻게 이 한반도 지형을 알고 6자회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기술자를 데려오지요? 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휴전선 바로 인근 지역이고 지금 아직 한국은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휴전 상태에서 UNC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중국·러시아 등과도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한반도의 정전상태 법적인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외국의 조사를 참여시킬 것인지 하는 것은 상황 진전을 좀 봐 가면서……

**○송영선 위원** 어쨌든 간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선 위원** 아니, 신중에 신중을 지금 2주 이상씩 해 온 대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는 일체 인터뷰도 안 하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미국·영국·호주·스웨덴 전문가를 불러오면서, 동북아 6자회담을 한다면서 이 주변 국가들은 완전히 입을 맞춰 가지고 조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 국가들을 배제하고 다른 전문가를 불러온다는 게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지금 참고하실 게 아니라 열흘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극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영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독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하고 있느냐?" 하니까 "독도기획단 설치했다. 독도 관련 홈피 운영한다. 홍보도 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서 경찰 주둔시키고 영·공해 방위를 하고 모든 법령을 독도에 적용되도록 하고 등대 등의 시설물 설치했다." 이게 전부지요? 보고 내용으로 보면 이게 전부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영선 위원** 이거 새삼스러운 것 아니에요.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

'독도대책위원회 결성, 조사단 배치' 외에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정부가 정말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펼치는 외교니까 '조용한 외교'인데, 우리나라가 진짜 조용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역동적인 국가에서 역동적인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10년만 봐도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껏해야 '성명 발표, 항의 서신, 일본 측 행동정지 촉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장관들은 사실은 할복하는, 하라키리라고……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그 마음으로 망언 한번 하고 장관 자리를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독도를 내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여론에 밀려 옷 벗은 장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장관님 보고 퇴진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지근한 대응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방훈련, 독수리훈련을 1996년부터 매년 여섯 차례씩 해 왔습니다. 동방훈련, 이게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독수리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기름값이 오르니까 1년에 두 번으로 줄었다가 진짜 기름값 올라간 2003년, 2004년에는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국방부에 얘기해서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안보회의에서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된다.

둘째 대안, 독도 주변에서 무력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없어야 되는데, 일본에는 공중 급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최고의 전투기라는 KF-16은 항속 9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원에서 떴다가 거기 가서 10분 있으면 되돌아 와야 돼요. 구경만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계기, 우리 이번에 봤지요? P3-C는 8대밖에 없어요. 일본은 100대입니다. 그래서 해군전력에 정말 최선을 동시에 같이해 주셔야 된다, 이것 지금 전부 당부를 드립니다, 따지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현재까지 전·현직 판사가 3명입니다. 현재 판사는 누구인지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영선 위원** 일본 왕세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사법재판소(ICJ)에 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ICJ에 일본은 계속 기부금을 내는데 우리는 안 내고 있습니다. 영향력 행사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해도, 설사 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말, 해양재판관은 있으면서 사법재판관은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국 지명위원회에, GNS 홈페이지에 외국지명 참고기관이 미국에 8개, 관련기관이 48개인데 북한도 관련기관으로 북한국립지리연구소가 등재돼 있습니다. 우리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잘못됐다, 인풋 하는 구체적인 채널이 없습니다. 이것 전번에, 2008년 7월 달 대정부질문 시, 2007년 10월 달 국정감사 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제가 두 가지만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송영선 위원** 예.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실지로 영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자료 내용을 해마다 제출하십시오, 몇 명이 가고 뭐 하고. 계속 제출하십시오. 저는 제출된 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독도가 구체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내법으로 만들자 말입니다. 저 외에도 열여덟 명의 국회의원이 법을 냈는데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의 반대입니다. 이유는 '내 마누라를 또 다시 내 마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마누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법 안 만들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중국은 해양법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군도, 서사군도 다 자기 법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11년부터 일본 교과서에 독도 표기 사항을 넣는다는데 우리 교과서 초중고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반론 내용, 왜 그것이 우리 땅인지도 우리 초중고 교과서에 넣는 것을 안보회의, 그다음에 교과부, 전부 협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송영선 위원** 보고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좀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또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을 가급적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결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9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공석 중인 민주당 간사와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선임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변경 등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문학진 위원님을 민주당의 간사와 또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문학진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저희 외교통상통일상임위원회에 다시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의 임시 간사로서 아주 활발한 간사 활동을 해 주신 신낙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 2. 공청회 개최의 건

(11시30분)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신낙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과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등의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의 진술인 선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의원 및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일정은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그리고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 현안보고(계속)

### 가. 외교통상부 소관

**○위원장 박진**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장관님께 지도를 좀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을 좀 보세요.

이 지도가 캐나다에서 92년도에 나온 지도입니다. 일본 지도인데요, 여기에는 씨 오브 재팬(Sea of Japan)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릉도' '독도'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캐나다에서 나온 지도인데 여기는 'Dokdo'라고 영어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일본해'로, 'Sea of Japan'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둘 다 제가 미국 헌책방에서 사온 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도 일본 지도에 'Sea of Japan'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다케시마'라고 돼 있고 국경선을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다 이렇게 그어놓고 있어요. 이것은 62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국에서 62년도에 나온 지도이고 하나는 92년도에 캐나다에서 나온 지도인데, 하나는 '독도'로 표시가 정확히 돼 있고 하나는 '다케시마'라 그래 가지고 국경선까지 이렇게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지도 중 대부분이 'Sea of Japan'이라고 돼 있고 'Sea of Korea'라고 돼 있는 것은 보기가 참 힘들어서 딱 하나 옛날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은 국회도서관에다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동해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독도를 외국에서 어떻게 표시하고 있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독도에 관한 망언이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급기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었고 외교청서까지도 이렇게 싣게 돼 있는데…… 60년도에 이런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사이 정부가 뭐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정부에서도 동해 표기 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외교부뿐만 아니고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도 하겠고 우리 국립지리원, 관계 되는 여러 관계 부처 또 국토해양부도 관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상대방에 있는 저거고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좀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지금 외국의 지도 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부분은 외교부가 대응을 하고 또 민간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외교부와 독도연구소나 이런 다른 데에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국립지리원도 있고요.

**○진영 위원**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대응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해서 시정한 건수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병기, 동해하고 일본해를 병기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유엔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입장을 발표했고요. 현재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든 지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이거 하겠다는 게 오래 됐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이거 하겠다는 게 오래 됐는데, 이제 외교부나 우리 정부도 입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자꾸 '조용한 외교', 뭐 '조용히 하자'고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다 외국 정부 아니에요? 또 외국의 민간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영토는 당연히 우리 영토라는 것을 가서 입증을 하고 항의를 하고 시정하도록 해야지, 대부분이 이제는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독도 표기가 돼 있는 데 별로 없습니다, 현재. 나타난 지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독도 관련법을 보면 지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하나 있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용수비대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큰 관계는 없고요.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이 있습니다, 총리 훈령으로. 그래서 주로 총리실에 있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많은 논의도 하고 또 정부 부처의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또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교부의 역할은 뭔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뭐 관계 부처, 여러 관계 부처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고려하고 해서 관계 부처에 우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외

교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독도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다 외교부를 쳐다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죽 한 대응이 일본에 대해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도 이제는 인식의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자세에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런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의 국제법적인 측면 또 국제정치적인 측면을 다 두루두루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다음 수순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과연 어떠한 조치가 실효적인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판단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자원화도 있고 연구소 설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의견은 어떠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이 바로, 저희들도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 참석해서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고 하는데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독도 내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국제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을 하는 데 국민적인 교육 목적으로 젊은 학생들한테 독도 여행을 장려도 하는 건 좋습니다. 해 가지만 그런 독도의 생태계 보전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그 문제가 국제 분쟁지역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건 회피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진영 위원** 우리 영토 위에다가 우리가 이용하는데…… 법률도 있잖아요,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영토 위에다 우리가 이용하는데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토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생태계 보전 측면도 있고 또 현실적인 측면도 우리가 전혀 도외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외교장관 입장에서도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계속적인, 또 그리고 음모적인 측면에서의 실익외교를 전개하는 데 대한 적절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유권으로 주장하는 발언 또 그 교과서 등이 발행이 되고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 엄정히 대처하면서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로서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천명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단호한 외교, 차분한 대응' 이런 것은 마치 고장 난 유성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듯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하토야마 총리마저도 독도가 일본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내의 여러 가지 주장, 교과서의 발행 등등과 관련해서 일본 방침을 분명히 하고 이제는 또 외교청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을 앞으로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내용은 뭐였습니까?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진 위원장, 김충환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독도 문제가 최근에 새로 부각된 것도 아니고 한일협정 당시에도 한일 간에 오랜 그런, 이 문제 때문에 13년 이상 한일협정이 지연이 되고 한 그런 문제이고 또 일본 외교청서도 1963년 이후에 계속 그와 같은 기술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독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항의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외교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이런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박주선 위원** 장관님,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말로 예전과는 다른 강도 높은 단호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특별한 또 단호한, 엄정한 외교 조치를 취한 내용이 무엇이냐를 저는 여쭤 본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전과 다른 조치를 취한 건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지금 이 중학교 교과서 문제 그다음에 이 외교청서 문제 일련 선상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기자 질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시간이 다 지금 경과되기 때문에, 제가 조치 내용을 여쭤 보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기술을 하게 되면 후세대 일본 국민들은 독도가 진짜로 일본 영토인 것으로 알고,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일본 후세대 국민이 이야기한다면 한일 간에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갈등 원인을 지금 제공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판을 하게 되면 영토 분쟁 또한 침략적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교과서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행을 하고 총리가 이를 뒷받침하고, 특히나 외교청서가 이를 또한 명백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교청서는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의 국가에 배급이 되고 배포가 될 텐데 이랬을 때 '이 외교청서를 보는 국가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파장은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조용한 외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등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솔직히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그다음에 독도와 관련된 특별대책위원회를 정부 위원회에라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 국제법 내용 또 외교적인 그동안의 활동성과 또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도 이런 것을, 모든 증거물을 모아놓고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강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미래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은 매우 한일 관계의 장래에 있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박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고, 좀더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를 총리실의 영토관리대책단의 회의를 통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일본 총리마저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이 조용한 외교 또 국제분쟁 지역화를 막는 그런 외교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독도 관련 외교정책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독도와 관련된 독도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더니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어떻게 저에게 제시했냐 하면 '일본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분쟁 지역화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적인 측면에서 독도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법이 외통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독도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구두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 대응' 이러한 용어만 반복하면서 이대로 묵인할 것인지, 일본 정부의 도발적인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의 발언을 묵인할 것인지, 용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저도, 박주선 위원님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서로의 조치가 자꾸 에스컬레이트(escalate)돼 가지고 이것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우리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 하는 데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오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표시하면서도 서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되는 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도 외교의 중요한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 끝났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이범관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난 2, 3월에 러시아에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이 인종혐오주의자로 추정되는 러시아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건과 중상 한 사건을 아까 장관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이범관 위원** 삼호드림호 피랍 사건 또 앞으로 있을 월드컵 주최지인 남아공의 치안 상태가 참 불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 여행객이 1000만에 이르고 재외국민이 700만에 이르는 이런 현실에서 재외국민 보호는 아까 장관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강력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나서 우리 재외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 13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납치, 감금, 행방불명…… 행방불명 이것도 강력 사건이지요.

지난번 러시아 유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범인을 못 잡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KBS가 '추적60분'에서 지난주에 방영을 했는데 우리 러시아 유학생의 피살 사건을 보고 일본 대사관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우리 사건을 보고 일본 대사관에서는 러시아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이메일이라든가 각종 연락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라는 조치사항'을 전부 연락을 해 줬어요, 러시아 재일 국민들한테.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유학생들이 어디 있나 연락처 찾고 난리난 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그때서야.

그리고 그 TV 보도 내용 중에 증언한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참 언론에 보도만 안 됐을 뿐이지 유학생들이 인종혐오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이 수많은 데도 대사관에 신고해 봐야 아주 미온적인 대응을 해 주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살인 사건, 피해 사건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100건에 112명이 3년 동안에 우리 사망 피해, 살인 사건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중에서 범인이 거주국에서 검거된 것이 44%인 44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사관이 자체 종결 처리한 것이 55%에 달하는 31건에 해당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종결 처리 하냐면 말이에요, '피해자의 장례 지원과 신속한 수사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므로 종결한다' 이게 종결이 됩니까? 범인을 추적하는데 적극적으로 영사외교 활동을 해서 빨리 주재국의 치안당국과 협의를 해서 범인이 검거되도록 계속 추적을 하고 독려하고 하는 활동을 해야지…… 아니, 장례 치르고 수사 의뢰했다고 해서 '사건 종결'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일부 대사관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대사관에서는 스킨헤드 사건에,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검거된 범인의 재판 과정까지 그 대사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1심 선고형보다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하도록 그렇게 대처한 예도 있고, 과테말라 같은 데서는 2009년 1월 달에 살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44회에 걸쳐서 출장수사, 출장을 가서 그 주재국 치안수사기관에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책임자들하고 면담을 하는 등으로 해서 참 활발한 활동을 해 갖고 범인이 그 덕분에 검거가 된 사례도 있어요.

이런 모범 사례를 다른 대사관에도 좀 전파를 하셔 갖고…… 대부분이 말이지요, '장례 지원하고 수사 요청했다' 그래 놓고 검거도 안 됐는데 그다음에 챙겨보지도 않아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외교부가……

**○이범관 위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다음에 제가…… 다음 우리 상임위 때까지 그 대책, 어떤 식으로 개선했다는 대책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외교, 영사외교를 확실히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영사인력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교부 총인력이 2188명인데 그중에 본부 영사인력은 8명에 불과하고, 재외공관 영사인력이 486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사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3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런 사건·사고에 관여할 수 있는 영사는 여기서 출장, 파견 나가는 경찰인력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 외교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더 다시 제고를 하셔야 되고.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외무성 본부의 영사인력이 140명이 되고 재외공관 영사인력이 14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특히 미주 지역이나 러시아, 중국 등 우리 교포가 많이 있고 치안 관계가 불안한 지역에는 영사인력을 확실하게 좀 선택과 집중 해서, 과감하게 좀 수술 조치를 해서 개선해서 증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재외공관이 담당하고 있는 영사 인력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아주 소규모 국가에서는 최소 재외국민 38명에 영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7만 3000명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꼴이 되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셔서 그런 문제는 빼 놓고, 일본이 지금 이런 독도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를 대비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등과 계속 국제적인 영토 분쟁의 하나로 끼워 넣어서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데서 이익을 보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듯이 '우리 독도만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분하게 전체적인 걸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국제사법 분쟁에 갔을 때 법적 자료, 아까 송영선 위원도 계속 강조하시던데 자꾸 자료를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실효적 지배다 해 가지고 관광선 보내니 무슨 주거를 거기다 하는데 그것 백 번 해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환경 오염되면 또 환경단체에서 난리를 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좀더 실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의 하나를 제가 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세계를, 국제를 상대로 해서 독도의 실효권을 인정받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까 외교부에서 일부 잠깐 얘기하시던데 교과서, 세계 교과서나 지도나 국제 공식문건이나 이런 데 계속 좀 올리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독도가 실효적 지배를 하는 우리 영토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참고로 작년부터 제가 계속 교과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3년 동안, 작년 국감 자료에 의하면 독도나 동해가 일본의 다케시마로 표시된 것이 4500건이에요. 그중에서 시정된 게 1000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실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가 '아, 한국에서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그런 자료도 계속 발굴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지금 외교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걸 공개를…… 진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데 "단호히 대처하겠다.", 얼마만큼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나 그 실적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서류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간단히 그냥 답변 한두 마디 해 올리겠습니다.

특히 영사 인원 증원 문제는 외교부로서도 지금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 사건·사고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7~2009년까지 3년 사이에 우리 국민이 살해된 것이 100건이 넘습니다, 해에. 과거에 비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그런 인원이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거기에 저희 영사 조력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교부의 인력이 이천백몇 명을 얘기, 그건 주재관 다 포함한 인력입니다. 외교부는 1900명대인데 이것은 1997년 수준 겨우 지금 거기에, 다시 줄었다가 된 건데요.

외교부 예산도요, 요새 기금도 포함해서 예산을 따지면 외교부 예산이 정부에서 쓰는 예산의 2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반예산으로 따져도 0.6%입니다. 18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또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타 부처에서 인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거를 영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특히 경찰 주재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외교부로 좀 받아 가지고 T/O를, 경찰 T/O를 가지고 그대로 해외에 파견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지금 협조를 통해서 주요국에는 영사 인력을 그렇게 해서도 보강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좀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충환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전적으로 좋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일본이 자기네 독도에 관해서 쓰는 예산에 우리 예산이 10분의 1을 채 못 따라갑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올해 국치 100년을 맞아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지난달에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원장님과 민주당 박상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중국 하얼빈하고 뤼순에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어서 반드시 발굴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1965년도 한일협정에서 손해배상 문제에 제외가 되어 있는 사할린 징병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치 100년을 맞아서 우리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 왕을 초청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건 일본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진전은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진전은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독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독도를 지금 우리 대

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까, 아니면 법적·역사적·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확실한 우리 땅입니까? 이것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국제법적 또 문화적, 역사적으로 확고한 우리 땅이고, 또 거기에 실효적으로 이미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우리의 영토, 불가분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앞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는 저는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 땅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고, 그래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교과서를 왜곡하고 또 외교청서를 발간을 하고, 이제는 하토야마 총리까지 나서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위한 기록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기록을 축적해 나가야 되지요. 아까 송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외교적으로도 정말로 단호하게, 뭐가 단호하게 하는 겁니까? 2008년도에 중학교 교과서 왜곡했을 때 우리 주일대사 잠정 귀국 조치 내렸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 소환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소환한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진영 위원님께서 지도를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전 세계의 지도에 독도가 아예 없거나 표시가 되어 있어도 다케시마로 되어 있거나, 동해는 거의 90% 이상이 일본해로 되어 있거나 해서 지도상에서는 사실 독도가 대한민국인 것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교과서 말씀도 아까 우리 이범관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서적상으로도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아주 위험천만한 이런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독도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땅이고 그리고 그러한 법적인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 정부의 4강 외교가 정말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천안함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국가로서는 매우 슬픈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우방 국가, 특히 주변 국가들로서는,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로서는 최소한의 위로라도 해 주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지금 우리 수색 작업에 도움을 주어야 할 터인데…… 일본, 침묵하고 있어요. 중국, 지난 4월 5일에 우리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했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그때 중국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왕광야 부부장입니다.

**○박선영 위원** 예, 부부장이었습니다. 왕광야 부부장인데, 그 왕광야 부부장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 또는 위로의 제스처를 공적으로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청와대 예방 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공적으로 나타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러시아도 왔고요.

**○박선영 위원** 러시아는 뭐가 왔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월에 한미 정상통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은 3월 28일 하토야마 총리가 우리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통해서 그런 걸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우리 군 쪽으로 그런 위로를 전달해 왔습니다.

**○박선영 위원** 군에다가 하는 것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4강 외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4강 외교도 두 쪽 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NP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13일에 워싱턴에서, 핵안보회의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미국이 NPR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게는 한 달 전에 그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에 언제 그것을 설명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실무선에서 죽 협의를 해 왔고, 저도 클린턴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4월 1일 날 받았고 해서 사실 우리는 실무적으로 일본보다 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실무선에서는 죽 협의를 해 왔습니다.

**○박선영 위원** 좋습니다. 미리미리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미국이 지금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을 폐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특히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상 발사 미사일인—크루즈 미사일 종류이지요—토마호크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핵우산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그 회의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시고 어떻게 표명하실 입장인지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미사일이 가장 실용적인 그런 핵무기입니다만 현재 미국은 그 외에도 공군력에 의해서 그러한 핵 억지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군 당국 간에도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미국도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에 대한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무리 공군력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토마호크 미사일이 없이 또는 공군력 하나만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NPR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너버스(nervous)하게 아주 과민반응을 보여 왔는데 이번 미국의 NPR 보고서를 빌미로 해서, 또 핑계를 삼아서 북한이 6자회담도 또 튕길 수 있고 반발하면서 핵무기를 더 개발하는 이런 제스처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북한이 조속히 NPT에 복귀해서 비핵화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반발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북한을 고립시키는, 스스로 고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발언 순서를 양보해 주신 이상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천심사 때문에……

장관님, 지난 2월에 오카다 외상 방한 시에 장관께서 "일본 민주당 정권 발족 이후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관계로 발전하는 데 만족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또 이런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 1월 12일 브리핑을 통해서 "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했다. 선린 우호관계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대사는 한술 더 떠 가지고요 "올해 초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취임한 후에 양자관계로 한국을 먼저 방문했고, 재일동포 지방선거 참정권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등 양국 관계가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라는 일본의 허울 좋은 망언에 칭송 일변도의 찬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겉만 보고 본질을 못 본 것입니다. 영토 문제는 외교·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

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외교에도 이런 미래에 대한 정세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발언들을 하셨습니까? 정말 딱해 보입니다.

더 딱한 것은 말이지요, 어저께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가 하토야마 총리 발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토야마 총리가 "독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전임 정부의 방향을 이어 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정운찬 총리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 반응은 일이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토야마가 그런 발언을 한 이후나 이전이나 똑같다고 총리가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는 도대체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자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외교부는 2년 전에 이 결행을 실행에 옮겨서 평가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 뭐 했습니까? 특히 정부와 주일대사관은 말이지요.

제가 주일대사관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주일대사관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해서 주요 활동한 것을 보고하라 그러니까 주일대사관에서 단 3건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주요 활동이라는 것이 '시민단체 접촉' '기자 접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백 보를 양보해서 억지로 관련성을 내더라도 10여 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주일대사관에서 활동한 것이 10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일본대사관에서 뭐 한 것입니까?

우리 대사관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께서 대사 소환 말씀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한심한 것은 말이지요, 지난 30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정 관련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없음. 다만……" 잘 들어보세요. "일본 정부는 과거사 기술에 있어 소위 근린제국조항에 따라 인근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것 바꿔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82년에 일본에서 만든 근린제국조항에 따라 일본은 과거사 기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을 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혹은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이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보좌관이 지적하니까 "표현이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외교부에서 했습니다.

장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말이지요, 이것도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이외에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미가요가 포함되어 있고 2차대전 당시의 자국민의 피해를 강조하고 독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페이스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 늘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책을 보면 포퓰리즘밖에 없습니다. 독도체험장, 현장관리소 설치, 방파제 건설, 주민숙소, 지금까지 나왔던 사업들 전부 중복하고 이벤트만 하는 거예요. 국제법 논리를 강화하고 민간과 함께 독도를 알리는 사업이라든지 사료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너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회부되기로 했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에 99엔 주는 그 99엔 문제, 을사조약을 고종이 주도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본 행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침묵과 외교적 마찰을 염려해서 비공식적인 활동만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외교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거든요.

외교부가 일본 내 카운터파트인 일본 외무성 때문에 그랬었는지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랬는지 일찍 문제 제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놓친 것이지요.

그러나 믿었던 일본 외무성마저 지난 6일에 보기 좋게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때린 것입니다.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고 '자국의 이익'임을 일본 외무성이 보여 준 것입니다. 외교적 관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외교적 관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국의 이익임을 일본 정부가 보여 준 것입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외교적 관례보다 자국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장관, 실리도 좋고 실용도 좋습니다마는 국민의 감정에 반하거나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자국에 손해를 가져오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급한 불만 끄니까 자꾸 '소방수외교'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급한 데 불만 끄고 다닌다고.

장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 감정을 그렇게 대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교과서에는 기미가요나 일본의 그 문제 이런 것이, 일본이 이렇게 보수화 경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 자체도 거기에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물론 소상히 다 위원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낱낱이 밝히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국제법적인 사료 발굴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게 특별히 우리 외교부에서 많은 인원과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정부로서도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우리 정부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염두에 두고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일본대사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구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외교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비극적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장관님이 주요 안보관계장관회의 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적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가안보라는 게 대결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서로 간의 위협 인식은 낮추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군비 태세는 강화하는 게 안보의 제일 좋은 조합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바로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그것에 가장 좋지 않은 최악의 조합에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2년간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협 인식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군비 태세는 굉장히 이완된 게 아니냐, 천안함 사건이 내부적인 일이든 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든 어느 것이든 간에. 그래서 이것이 위협은 올려놓고 태세는 이완되어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조합이다, 이런 우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유엔에 부탁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엔 어디에다가 지금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가지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 하면 당장 이게 무슨 안보적인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느냐, 아니면 국제해사기구(IMO) 같은 데에 가져가느냐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염두에 둘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불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중한 상황을 그

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총리실에서 '총리가 독도를 방문하겠다' 이것 외교부하고 상의한 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실무선에서도 상의를 했고,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송민순 위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리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전시행정 식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우리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데. 그런 점을 외교부가 견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한 핵 능력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그냥 단서도 없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다." 지난 3월 30일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달 전에 미국의 DNI에서는 "핵무기 보유는 미확인이고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법적 지위, 다시 말씀드려서 핵 보유국이냐 아니냐 하는 법적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실제 핵 보유 여부에 대해서 한미 간에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인식 이런 것은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한미 간에 공유하고 있는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운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핵실험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보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정확한 라인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이야기하시고, 미국에서도 혹시 우리하고 공유되지 않은, 공조되지 않은 입장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빈틈없이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핵 정상회의 가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이번 정상회의는 아마 세 가지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에서의 핵 감축 문제하고 그다음에 핵연료 사이클 문제하고 지역적 핵 확산 같은데 우리로서는 역시 지역적 핵 확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역적 핵 확산 방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참석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이번 핵 안보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핵무기,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국가가 주체가 아닌 테러 위협이 현실적이라는 데 대해서 국제 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물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느냐, 세 번째로 원천적으로 핵무기 기술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테러단체에 핵무기나 핵물질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포괄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역시 그런 국제적인 핵 테러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또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할 계획입니다.

**○송민순 위원** 저도 그와 유사한 비정부 간 회의에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한국으로서는 핵물질이든 또는 핵무기든 간에 이것이 유통되고 확산될 우려는 지역적 핵 확산, 우리의 경우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회의에 가셨을 때 이니셔티브를 분명히 제안을 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세를 확실히 취해 주는 것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안보관계 장관이시니까 간단하게…… 우리 한국군 작전지휘권 관련돼서 지금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작전지휘권이라는 것이 미국이 빼앗아 가고 우리가 도로 빼앗아 오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관하고 또 돌려 오고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송민순 위원** 후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리고 그 합의가 제대로 지금…… 그 합의에 따라서 이게 기술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맞춰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바로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것은 한미 간에 어떤 정치적인, 물론 표현 같은 것이 환수다 이관이다 이런 말 가지고 표현의 문제는 있었겠습니다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정부에서도, 특히 지금 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진상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마지막 질의 순서로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신낙균 위원입니다.

독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많은 것은 생략하는데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일본 교과서에 이것이 첨부된다는 것은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예외 없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그런 거짓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중고교까지 계속해서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시겠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이, 조용한 외교가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차분한 외교라기보다는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실질적으로 아무 대처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하는데 거기에 장관님의 반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반응을 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분개하고 비판하는 거기에 많은 이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감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국 사람들의 이런 비판은 감정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료 발굴사업, 또 표기 대응사업을 하신다는데 저도 오래 전부터 이 문제는 관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좀더 투입했으면 하는 건데 그 필요성이 더 지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계속 하시는데, 어떤 전문가도 그러더라고요. "독도 문제, 한국이 실효적 지배만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논리체계를 제대로 못 갖춘다." 이런 지적을 전문가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실질적인 제안으로는 초등학생부터 이 문제를 계속 배울 것 같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 대처 중의 하나로 독도에 관한 증거 자료를 일본어판으로 좀 발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본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적인 세력이,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직접 홍보하는 방안도, 정부가 하기 어려우면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 보시고요.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750년대의 지도, 또 1760년대의 지도가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공해를 'Sea of Corea', 그러니까 K가 아닌 C로 표기한 'Corea'라고 명기되어 있는 걸, 두 지도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진기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대사관을 통해서 "이거를 사진으로 좀, 자료로 확보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것도 작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쓰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제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현안 질문…… 재외국민 안전에

관한 것, 특히 아프간의 모 기업체 근로자 안전 문제라든가 삼호드림호 피랍 사건 문제, 또 우리 학생 러시아에서 피살당한 사건 이런 것, 북핵 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달에 유럽 출장 갔을 때 파리에서 우리에게도 문명비평가로 잘 알려진 기 소르망 박사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이서만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나눌 수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외교부하고 관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 말은 "현재 한국의 문제는 경제 문제보다는 교육의 질과 문화 홍보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경제에 직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이번에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 사람이 한국 방문했을 때 우리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지적하시는 게 이번 G20 정상회의 때 우리 중앙박물관을 홍보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중앙박물관은 자기가 보기에 매우 뛰어났는데 외국엔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번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문화외교라든가 문화 홍보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그냥 '예스, 노'로 답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말씀……

**○신낙균 위원** 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고맙습니다. 제가 맨 뒤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G20 때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지금 아주 중점을 두고 지금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특별 그런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용해서 오·만찬이라든가 정상이 아니더라도 수행하는 기자 또는 각료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 관련,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역사박물관 자료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수집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우리가 일본어로 해서 소위 일본의 국민들을 직접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그것은 사실 이미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그런 구상을 얘길 한 바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NGO를 통해서 일본 국민에게 직접 홍보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감정적인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 신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오찬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김충환 간사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시고 식사하러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저도 간단히 독도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외교부에서 일본에 대한 항의 표시한 것이 한 단계 높였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한 단계 높였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대사를 직접 초치해서 엄중히 항의했고 또 문서로써 또 다시 항의를 했고 한 것으로, 또 주일대사관을 통해서도 조치를 했고……

**○김충환 위원** 그게 과거에 비해서 한 단계 높인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무슨 뜻으로 한 단계라는, 높였다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김충환 위원** 외교부에서는 그게 한 단계 높인 게 아니군요? 말하자면 밖에서 그렇게 보고 있던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가 하여튼 가

장……

**○김충환 위원** 이번에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강력한 입장을 표시한 것이 대사를 장관이 직접 초치해서 한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항의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과거에는 대사를 이렇게 소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과거보다 더 강하게 항의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김충환 위원** 그런데 지금 조용한 외교다, 이렇게 항의하는 정도로서 일본의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제일 먼저는 첫 단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공개적으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도 국민들의 이해는 필요하지만 또 그것은 어느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조용히 하고 하는 그런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구체적으로 느낌이 과거와 다르게 더 강하게 또는 아니면 실효성 있는 어떤 조치를,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난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독도 문제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단기일 내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하에 꼭 강한 그러한 표현보다는 이걸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제법적으로, 또 효력이 있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번 일본이 그렇게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좀더 강한, 강한, 강하다는 거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지난번에 어업협정 맺은 이후에 독도가 중간수역에 놓이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중간수역에 놓이게 된 것을 일본 측에서 볼 때는 이제 자기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명확하게 어업협정의 그것은 영토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양국이 다 공동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걸 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는 수긍하기가 좀 곤란한……

**○김충환 위원** 그러면 일본의 이와 같은 교과서 문제 반영 이후에 있을 조치는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의 조치요?

**○김충환 위원** 예, 일본이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분쟁화하는 것이 일본의 일차적인 목적이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영토 문제라는 것은 그런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보실 때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실적으로 국가 간의 이러한 문제는 어떤 일시적인, 단칼에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실효성 지배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첫째로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은 이미 여러 가지의 관계법령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독도 수비를 하는 그런 시설물이 이미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하는 이런 것으로써 충분합니다마는 그 외에 또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울릉도와 독도 간의 어떤 모섬—자섬 관계를 우리가 역사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사료를 더욱더 발굴해 가지고 국제법적인 논리를 보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독도를 다

녀오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못 가 봤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독도토론회에 갔더니 1950년도 그때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논의하는 한국 측 대표가 미국 사람이 "독도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저기 전라남도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한국 측 담당자는, 책임자는 독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협상에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올 때 한국 사람들은 독도를 모두 잘 아는 섬으로, 잘 가 본 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효적 지배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은 법적으로 실효적 지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인 거지……

**○김충환 위원** 교과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일본 국민 전체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뭐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김충환 위원**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도 그것은 가르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다, 모든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 독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독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꾸 한일 양국 간에 문제가 되고 분쟁이 되기 때문에 점점 일본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된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도에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가 볼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하고 또 그것이 우리와 가까운 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으론 저하고 다른 것 같고 또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정부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세계 교과서가 5000여 종이 한국에 대한, 독도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정을 위해서는 지금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 정부가 쓰는 예산의 10분의 1도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음 예산 짤 때 중요한 주제로 넣어 가지고 크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매번 그렇게 예산요구서를 내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김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 위원장님 딱 한마디만 좀……

**○위원장 박진** 예,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상득 위원** 제가 자원비즈니스 때문에 해외에 가 보니까, 아주 작은 대사관에는 상무관이 없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 위원** 그래서 KOTRA 직원을, 소장을 상무관으로 임명한 데가 몇 군데 있습디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 위원** 그런데 그 대사관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KOTRA 소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위원** 또 감각이 우리 대사관의 상무관보다는 KOTRA 직원이 훨씬 더 비즈니스 감각이 그래도 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 위원** 그래서 저는 비록 상무관이 있는 곳에도 KOTRA 소장이 좀더 활동을 할 수 있게, 그것이 아마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로 좀 발령을 내서 대사관에서 KOTRA의 기능을 좀더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복수는 할 수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상무관하고 KOTRA 하고요?

**○이상득 위원** KOTRA 직원을 또 있는 곳에. 왜냐하면 정식 T/O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거든. 자기 돈 주고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 위원** 그래서 저는 대사관에서 지금 상무관하고 같이 더 보완해서 상무관을 복수로 그렇게 발령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상무관이 있는 대사관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 위원** KOTRA 소장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또 상무관으로 발령을……

**○이상득 위원** 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KOTRA에 나와 계신 분들의 신분이 KOTRA는 지금 사실은 반관반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교관 패스포트(passport)는 필요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득 위원** 이미 없는 곳에는 발령을 내고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정진석 위원님 다음에 하기로 한 건데.

**○정진석 위원** 아니, 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장님, 기록상 한 가지 좀 정정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전에 박선영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천안함 폭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주변국 반응이 어땠느냐 여쭤 보시는데 러시아 측 반응이 하나가 좀 누락이 됐는데요. 4월1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애도를 표명하고 원인 규명 기대를 희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명 발표가 있었다는 점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한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기록에 올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그리고 아까, 박선영 위원님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별도로 외교부에서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오전에도 독도 얘기를 많이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독도 문제는 역사의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유 장관님, 독도가 영토 문제입니까, 역사 문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한일 간에는 영토에 관한 분쟁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왜냐하면 문화적·법적 고유의 우리 영토이고 분쟁은 없다는 공식 사항이고 다만 이 문제를 우리는 좀더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일본 측은 이것을 단순한 국제법적 측면에서 영토 문제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일본은 이 문제를 영토 문제로 보는 거고 우리는 좀더 명확히 정리하면 영토 문제이자 역사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나 외교백서에 좀더 그런 게 명백히 기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영토 문제라고 보는 것은 그거는 영토권 그러니까 식민지 때부터 영토였다, 그 연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45년 전에도 일본 영토였고 또 지금 계속 영토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영토 문제는 명백한데 다시 독도를 교과서에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것은 '독도 탈취 기도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재침략의 의미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데, 유 장관님은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일본이 이러한 문제를 자라나는 청소년들,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이러한 그릇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영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선배 외무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변영태 장관님 때, 1954년인데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한다." 외교부장관이 담화문을 통해서 못 박았단 말이지요. 하토야마 수상은 "전임 정부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어간다. 전임 정부와 입장이 같다." 이랬단 말이지요.

우리는 최초에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규정했는데 저는 그 입장에,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입장에 계속 서 있는 겁니까? 유명환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문제를 뭐 그렇게 당장 무슨 침략을 하기 위한 저거다라고 정의한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수교, 국교 정상화 교섭 때에도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었던 거고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런 궁극적인 가능성에도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너무 그럼 옛날 얘기를 좀 여쭤봤다면, 질문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참여정부의 것과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참여정부나 지금 정부나 정부를 초월해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일본이 이것을 영토 문제로 접근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임 정부에서 못을 박았단 말이지요. 어떻게 그거와 변함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에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독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영토 문제라고 일본이 제기하는 것은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그러니까 한반도 침략에 있어서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이 독도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지만 러일전쟁 와중에, 1905년 2월 22일 날 시네마현 고시를 통해서 합병을 하고 그 이후에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우리 당시의 정부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역사의 그런 문제의 하나로 더 강조해서 보고 있는 거고, 일본은 단지 그것을 국제법적인 논거로 무주지 점거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 왔지만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기 이전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우리 국민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금방 유 장관 말씀한 거는 변영태 외무장관이 54년에 얘기한…… 똑같아요.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한 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한다."라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변영태 장관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명백하게 선언하고 못 박았단 말이지요. 이것이 한 번도 변화되거나 이것이 윤색된 일이 없거든요, 역대 정부에서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동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또 금방 말씀이 참여정부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동영 위원** 같은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정동영 위원** 확실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다면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외교백서에 없어요. 또 이게 외교부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래서 변영태 장관 또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 또 제가 NSC 위원장으로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NSC 회의 결과물을 발표한 담화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교부 홈페이지에 저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정의화 위원입니다.

독도 문제는 오전에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매사를 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독도에 관해서 일본은 더 이상 소탐대실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에, 제가 일본 조야에 하는 이야기고요. 일본 조야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인에 있어서 독도는 우리 한국인의 자존심이고 어쩌면 우리의 영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올해가 경술국치 100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화요일 날 일본 의원님들 몇 분 만나고 조선왕조 의궤 반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100년 정도 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 가슴을 늘 찢어지게 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역사적인 사실 중의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남의 나라이지요. 그 남의 나라 왕후를 살해한 이 사실은 일본이 정말 뉘우쳐야 될 것이고 일본이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서 진실로 사과한다면, 그리고 가까운 이웃으로 남고 싶다면 독도 문제는 물론이고 조선왕조 의궤와 같은, 강점기 동안에 탈취해 가거나 또는 도굴을 시켜서 그것을 매매의 방법으로 사서 기증을 했거나 어떤 방법으로 했거나 간에 경술국치 100년의 이 시점에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유물들은, 그것을 돌려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그런 것을 옮길 때에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어제 아래 다녀 온 입장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일본 조야에 제가 이 메시지를 우선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천안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증거를 확보한 뒤에 대응조치를 논의한다는 입장은 저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암초에 의한 거나 이런 어떤 단순 사고가 아니고 추측하는 것 중의 하나인 어뢰나 기뢰 등 외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향후 대응방안에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 상황이 상당히 복잡다기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될 것이고 이것을 입증할 물

증을 확보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또 물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외교안보 차원의 국제적인 후속조치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듯이 몇몇 나라 외국, 영국이나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몇몇 나라가 가담하는 차원이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확보를 위해서는 유엔이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외교부장관께서 좀 나서서 조사단계에서부터 유엔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실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휴전상태이고 정전위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유엔군 사령관이 있고 또 유엔군 사령관은 매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고 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것을 미국, 미군하고 상의하고 그것을 또 유엔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상당히 면밀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에 난 것은, 우리의 우방국 또 구체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국가를 수사에 참여시키되 이 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좀더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대로 또 지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검토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강산 문제인데요, 사실 북한이 이런 강경조치를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그런 일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 정상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 규범상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전혀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이고요.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외교부 장관과 또 관계되는 우리 부처의 부처 장관들이 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가 혹시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매우 불법적인 또 비합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의 이익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북측하고 지금 통일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사실 며칠 후에, 다음주에 할 통일부에서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게 금전적인 계산상으로도 북한에 이익이 될 수가 없고 또 이게 국제적으로나 앞으로 북한이 개방을 해 가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제가 확실히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하겠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행위는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치와 논리적으로……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정의화 위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 가능하도록 자료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계산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커넥션에 대한 우려가 지난 국정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점차 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르게 말해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 정의화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모시는 문제가 조선족을 포함한 우리 한민족 전체의 숙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일본 외무성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문제는 여러 번 일본 측에 자료 요청, 자료 발굴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러면 답변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새로운 자료를 더 찾지 못했다는 그런 회신이고, 앞으로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박상천 위원** 애초에 안 의사의 시신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이 안 의사의 시신이 밝혀지면 우리 민족이 묘소를 차리고 그것이 독립운동의 성지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알 수 없게 만들었는데 외교부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한국 독립운동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일본이 아주 철저한 기록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어디엔가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기록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새로 찾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일본의 위신을 지켜주면서 이 시신을 빨리 모셔야겠습니다. 이것 순국 100주년이 되도록 시신도 모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가지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드림호, 소말리아에 있는 호비호항에 입항을 했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그런데 이 소말리아 해적선은 삼호드림호를 납치한 해적 행위의 현행범입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현행범인데 안전지대로 들어가도록 놔둔 것은 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뭐 때문에 이순신함을 그렇게 빨리 급파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박상천 위원** 왜 자기 나라 항구로 들어가도록 놔뒀느냐 이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여러 가지 작전상의 문제점 또 인질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급파를 했고 그동안에 죽 해적하고도, 선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압력 또 물리적인 시위 이런 것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박상천 위원** 자기 나라 국민이 타고 있는 선박의 피랍 현장을 보면서까지도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 청해부대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을 건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정부로서는 인질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한다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또 그 유조선이 엄청 큰 유조탱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것을 정선시키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일단 현재 정박한 주변에서 정찰 및 차단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본국과 연락해서 행동을 취했을 건데 나는 본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다음에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NPR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핵 보유를 강화시키는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반면에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 공격을 않겠다는 미국의 방침이 천명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만 결코 이것은 미국이 어떤 제삼국을 위협하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자기의 핵 개발을 계속하는 구실로 삼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그전에 부시 정부 때 '악의 축' 발언 이후에 그것을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을 강화시키는 구실로 삼았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은 어떠한……

**○박상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6자회담이 이다음에 재개될 경우에는 우리 외교부에서 나간 대표하고 북측 대표하고도 교류가 있을 거니까 그때 이것을 잘 설명해서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마호크미사일을 폐기한다고 그랬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그러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 억지력, 이것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런 핵우산 제공은 핵무기에 의한 것도 있지만 소위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라는 것은 핵뿐만 아니고 재래식 전투력을 투사해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박상천 위원**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재래식보다는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실상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 대해서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잠수함이나 선박에 의해서, 토마호크미사일에 의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기한다고 그럴 경우에 그 대안으로 무슨 MD(Missile Defense)를 국무장관이 말했다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인접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뜻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의 실질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지금부터 더 깊은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이것 이대로 두면 말만, 방침만 천명했지 실제로는 핵 억지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측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미 간에 계속 그 문제를 작년부터 협의해 왔고 현재는 미국의 공군력 및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력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MD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핵 억지력에 MD가 직접 저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박상천 위원** 토마호크미사일을 폐기할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은 소위 '익스텐디드 디터런스(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통해서 재래식 전력의 투사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박상천 위원** 재래식 전력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힘으로도 충분한 것이고, 문제는 핵인데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실질적인 보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핵은 꼭 핵뿐만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의 억지력(Deterrence)에 전혀 약화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박상천 위원** 그것은 말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독도 문제 말씀 좀 드리지요.

'요미우리신문 오보냐, 아니냐'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다' 이 주장만 하고 정정보도, 손해배상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우리 국민들 1886명이 국민소송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정정보도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재판에서 요미우리신문은 "오보가 아니라 사실보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요미우리의 이 보도는 후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역

사적 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가요, 요미우리의 이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법적 조치 강구, 이런 조치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미심쩍어하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요, 그것은 분명하게 일본 정부가, 외무성 대변인이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고 요미우리 보도도 인터넷의 기사를 철회함으로써 저희들은 논란이 이미 종식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문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랬을지는 몰라도 요미우리신문 측은 재판에 나와서 사실보도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언론사를 상대로 재네들이 기사를 취소하고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그 팩트(fact)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일반 국민들은 꼭 우리 장관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일본 유력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사실상 묵인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왕 방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추진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단 초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것 이상 아무런 진전이 지금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저는 우리 국민감정이요, 일본이 짬만 나면 독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도발—도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도 있지요. 진심 어린 사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이것은 완전히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왕 방한 문제, 이것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 밝혀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있고 한일 관계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좀더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러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관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다면 이 미래지향적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난 우리 정부가요, 꼭 무슨 국민적 감정 여기에 편승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더 딱 부러지는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썩 성에 차지 않는 이런 대응을 하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정부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프간이요, 파병하기로 되어 있는데 파병예정지인 파르완주의 차리카르라는 데지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 정부는 그동안에 이렇게 죽 설명을 해 왔는데 KOICA에서 지난 1월에 작성한 현장 설명서를 보면 "주둔시설 공사가 시작이 되면 탈레반 공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NGO 단체인 전쟁·평화보도원이라는 NGO의 보고에 따르면 "자살 공격, 도로변 폭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지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군과 아프간 보안군이 지난해에 이 차리카르 시내에 설치했던 지역작전협력센터 이것을 결국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매우 불안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파병예정지 인근에 지뢰지대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실사단을 파견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줄곧 여러 군데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탈레반 공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미군의 지역작전협력센터를 이전하기로 한 것은 그것이 불안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우

리가 독립적인 PRT를 거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뢰지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가 해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거기를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미군뿐만 아니고 현지의 아프간 주정부 그다음에 지뢰 조사를 하는 NGO 단체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의혹은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학진 위원**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혹시 필요하면요, 이렇게 자꾸 여러 군데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파병 이전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외교안보수석이었던 김병국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보도가 됐습니다, 내정이 된 것으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쇠고기 사태 때 경질됐던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사로 나갔다가 한은 총재로 돌아왔지요, 며칠 전에?

그다음에 물가상승 고환율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질이 됐던 최중경 기획재정부1차관이 필리핀 대사로 갔다가 또 최근에 경제수석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말이에요, 이 외교통상부의 공관장 또는 기관장 자리가, 김병국 교수도 마찬가지고 경질됐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경질된 사람들의 집합소인지 무슨 피난처인지, 이런 인사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학진 위원** 이 김병국 교수를 코리아파운데이션 이사장으로 누가 제청을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외교부에서 꼭 제청만이 필수조건은 아니고 여러 사회 각계 각계에서 유능한 인재를 추천받아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교부만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학진 위원** 물론 그럴 텐데…… 아니, 외교통상부장관이시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들을 OECD 대사, 필리핀 대사 이렇게 내보내고 말이에요. 외교부에도 OECD·필리핀 대사 할 인재들이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신데,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책임지고 물러났던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갖다 앉히느냐 이거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 내에서 이게 아마 불만들이 많을 겁니다. 장관이 이런 것 좀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무슨 말씀인지……

**○문학진 위원** 장관이 "제청 안 했다." 그러고 말이야. 물론 임명권자의,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지요? 대통령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어도 우리 장관께서 대통령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듬뿍 신임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문제는, 이렇게 잘렸던 사람들이 주요 공관장의 대사로 가는 것은 우리 장관께서 앞장서서 막아 주고 이래야 외교부의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하지, 이런 식으로 가라 했다가 또 중요한 자리로 다시 복귀시키고 이러니까 '돌려막기식 인사'라 그러고 '회전문 인사'라 그러고,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관께서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이제 보충질의 그냥 하는 겁니

까?

**○위원장 박진** 예, 바로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장관님, 지금 문학진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한 장관님의 답변은 제가 지금까지 들은 답변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답변인데…… 아니, 어떻게 코리아파운데이션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청와대의 인사행위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외교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코리아파운데이션이 외교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집행 보조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 거기의 장을 임명하는 데 외교부장관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전체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외교부 전체 조직의 외교 인력을 활용하는 그러한 원만한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장관님께서 인식이 꼭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한국의 주요 국가의 공관장이 전부 비외교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한국 우리 외교관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저하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장관님의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대통령께서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유엔에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3월 30일 그 이전까지는 "주먹구구식 추측이나 예단으로 이렇게 혼란을 부르게 되는 것은 가족을 더욱 슬프게 하고 상당히 어렵게 한다." 그 이전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오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월 6일, 4월 7일 이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 유엔 이렇게 하겠다" 이건 벌써 한쪽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서 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의 원인을 어느 한쪽으로 지금 그 예단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굉장히 상충되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고 계신데,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혼란이 더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여기 북한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북한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 코르푸(Corfu) 해협 사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 대통령께서 이미 스스로가 이렇게 예단성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혼란이 더 생기는 거다, 그래서 유엔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가 유엔을 거론하는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청와대 대통령과 그 보좌진에 대해서 미리 입력이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저는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박진 위원장,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송민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제 발언이 선입관이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일반적으로 어저께 국회 본회의 때도 그렇고, 그것은 일반적인 취지로 투명성, 그다음에 객관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북한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하는 건 결코 우리가 반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질문을 가지고도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 응답을 보면 "죄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단을 하지 말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씀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송민순 위원** 아니, 그래서 좋은데,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보면, 유엔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 우리 국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엔에 가서 하겠습니까? 이건 벌써 그러한 상황을…… 아니, 정부에서 북한의 관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유엔에 가서 이야기할 것도 없는 유엔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는 단순한 말 이상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지금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이야기는 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도록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청와대 이야기인데 말씀이지요. 왜 김정일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가 중계방송을 계속 해서 마치 한반도에서의 모든 일은 김정일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세계의 유수한 언론들도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서 "한국의 프레지덴셜 오피스(presidential office),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언제 중국 간다고 한다'고 한다" 이렇게 인용해서 보도를 해서 그 자체가 벌써 맞지 않고, 그 사실이 정확하다 해도……

제가 1분만 더 하게 좀……

**○위원장대리 문학진** 예, 그러세요.

**○송민순 위원** 그다음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서 약간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장관께서 청와대에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다, 청와대 좀 조심을 시키는 것이 좋고, 제가 그런 외신을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러나, 약간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 아닌 것에 대해서, 뭐 우리 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 관련된 일에서 중계방송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그다음에 독도 있지 않습니까? 독도, 사실 이거 전에 정부에서도 계속 보면 처음 초기 들어올 때마다 일본에 대해서 약간 가드(guard)를 낮추어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잘하려고 하다가 꼭 중간쯤 가서 거꾸로 이렇게…… 당한다기보다도 하여튼 일본이 강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알기에는 14억인가 그렇던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14억…… 다른 것, 용역도 합해 가지고 다 해서 14억……

**○송민순 위원** 다 합쳐서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민순 위원** 이것도 물론 동북아역사재단이 있지만 역사재단이 하는 것과……

기왕이면 더 질문하실 분 없으면 마이크 좀 켜주세요.

**○위원장대리 문학진** 더 질문하실 분이 세 분 더 계십니다.

**○송민순 위원** 세 분 더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문학진** 재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건 뭐 좋습니다. 재보충질의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면 계속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문학진** 아니,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요.

세 분 더 하시고…… 그리고 송 위원님, 지금 한 2분 더 드렸거든. 재보충 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장님 권한으로 마이크가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문학진** 위원장 권한에 대해서는 장관은 가만히 계십시오.

(웃음소리)

**○송민순 위원** 위원장 권한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돌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학진** 예, 재보충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장관 시간 많습니다.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부산 중구·동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랍된 유조선 삼호드림호, 이 삼호드림호도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제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해운회사이고 지금 우리 부산이

제1의 무역항이기 때문에 선사가 많아서 이 사건에 부산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부노 사건 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때 174일……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오래 걸렸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억류 생활에서 나온 선원들 얘기가 "삶 자체가 짐승보다 못했다.", 그런데 그때 또 '우리 외교부의 초동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지금 군사작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인질 구출에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또 이게 유조선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걱정도 좀 됐는데요.

지금 이 억류가 장기간으로 또 될까 봐 걱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충무공이순신함이 현재 급파된 것이고 또 선사하고 해적 측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조언도 하고 또 주변에서 우리 군함이 무력시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지금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초동 대처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건 연락받자마자, 우리 배가 있는 지역하고 1500㎞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의화 위원** 그런데 동시에, 이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 같은데 네덜란드 군함이 독일 화물선을 구출했다고 그러던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EU의 무슨 항해 매뉴얼 같은 게 있는 모양이고 그 매뉴얼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경우에는 그 매뉴얼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의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일 중요한 것은 인질의 안전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 봐서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릅니다. 특히 그런 유럽 군함 작전한 케이스를 보면 인질하고 해적들하고의 어떤 격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선실 문을 걸어 잠그고 대피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을 봐 가지고 작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사실 해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은 소말리아가 정상적인 국가로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어떻게 보면 유엔 차원에서 저는, 대책을 마련하고 밖으로 내놓고는 못 한다 하더라도 물밑에서라도 그 작업들을 해서 소말리아가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건 많이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국제회의도 자주 열렸고, 또 그런 유엔안보리 결의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도 했고 해서 그런 국제적인 노력에 지금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의 마부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 삼호드림호의 피랍자들이, 선원들이 하루빨리 좀 석방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의화 위원** 근본대책은 아무래도 그 뒤에 마련해야 되겠지요. 우선 하루빨리 억류에서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참고로 현재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 억류되어 있는 배가 한 20여 척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금년에 70척이 피랍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 퇴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적인 공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뾰족한 그런 성과가 나온 것은 없지만 그런 노력을 지금 적극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외교부에서 지금 우리 피

랍 선원들 억류를 하루빨리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지금 선사 측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외교부에 24시간 대책반을 구성해서 영사 담당 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따로 제게도 보고를 좀,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예,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삼호드림호 문제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대응을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아니, 해적의 현행범에 대해서 자국 영토로 피신하도록 바보 같은 대응을 했다고, 정부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박상천 위원** 여기서 군사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를 전개할 시간은 없고, 국민들은 우리 청해부대가 급파됐으니까 잘되겠지 하고 있다가 전부 좌절한 느낌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이야기하세요. 정부에서 거기에 대응한 팀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상천 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1세기에 해적 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 돈 번 사람들이 케냐에 와서 좋은 주택가에 집을 삽디다, 내가 가 보니까.

21세기에 해적이란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유엔 안보리 산하에 해적 소탕을 위한 상설군을 창설하든지, 주요 국가하고 의논해 가지고요 21세기에 해적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기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그런 제안을 한번 하세요. 그거 누가 싫어할 제안은 아니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리고 독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외교부가 종래에 지켜 온 '조용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대책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번에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가 나오니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집을 짓고 부두 시설을 만들고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것은, 실효적 지배가 거기에 건물 짓고 집 짓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박상천 위원** 아니, 그런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사실하고 다릅니다.

**○박상천 위원** 우선 실효적 지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실효적 지배는 점유권을 말합니다. 국내에 비유해서 말하면 어떤 땅이나 집을 주인이 아닌 사람이 지배할 경우, 물론 주인이 지배하는 것도 지배입니다마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차지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실효적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말하면 점유권이에요, 점유권.

독도는 우리가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영토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적 대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토라고 하는 걸 밝히느냐? 이거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뒤로 우리 땅이 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왜 독도까지 가지를 않았는데 그게 우리 땅이 됐느냐?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우산국이 있는 울릉도를 우리가 점거해서 법속시킨, 우리나라 영토화한, 그때 이미 그 부속도서가 함께 우리나라 영토화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해서 독도 홍보 대책을 다시 강구하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상천 위원** 그리고 '우리는 신라 때 우산국을 정복해서 그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차지했다'고 하고, 일본은 청일전쟁·러일전쟁으로 사실상 한국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이후에 독도를 점유해서 군사기지화했는데 그 즉시 우리가 항의를

못 한 것은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미 국제 문제화할 힘이 없었고, 그 뒤에 바로 합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한일합병으로 이어져서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아까 정동영 위원이 말 잘 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일본이 한국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이후에 빼앗은 식민지 영토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너희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식민지 다 반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너무 작은 땅이라 명시만 안 돼 있지, 이렇게 했느냐?' 하고 따지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효적 지배'라는 말과 함께 독도가 우리 소유라고 하는,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라 이사부 장군 이후의 소유권을 함께 주장을 하고, 오히려 소유권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소유권은 내팽개치고 '실효적 지배'라고 그래서 '점유권'만 주장을 하면, 남의 땅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도 실효적 지배입니다.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실효적 지배인 거예요, 소유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래서 한국의 영토권,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먼저 주장하시고, 그 뒤에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위원님 말씀 뭐…… 위원님도 법을 공부하시고 저걸 하셨으니까 제가 위원님 해석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국내법적으로 실효적 지배의 의미가 '점유권만을 의미한다' 이러실지 몰라도 국제법적 예에서의 이펙티브 컨트롤(effective control)이라는 것, 소위 우리가 '실효적 지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제법상 '국가가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 영유 의사를 가지고 평화적이고 계속적으로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이펙티브 컨트롤이다, 이렇게 정의돼 있기 때문에……

**○박상천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도 국제법 전공한 사람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 죄송합니다.

**○박상천 위원**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영토를 취득하는 것에는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영토가 됐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현재도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가령 주인 없는 도서를 먼저 차지한 사람은 그 소유권 취득합니다. 꼭 실효적 지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지요.

**○박상천 위원** 승인할 때에는 무주물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있고 정복을 해서 취득하는 게 있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거 복잡하게 할 것 없고, 국민들한테 국제법 강의하지 마시고 '신라 이사부 장군 이후에 우리 영토화됐다.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영토화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기 식민지배 단계에서 차지한 것이다'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것을 일본어로 쓰고 영문으로 쓰고 프랑스어로 써 가지고 반포를 하고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상천 위원** 조용하게 하지 말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조용하게 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재외공관 공금 횡령사건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됐고요,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재외공관' 하게 되면 혹시 오해를 줄 것 같은데요, 대개 재외공관의 개념에도 거기에 광의로 문화관광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별도로 공관장의 회계감사, 회계통제를 안 받고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시스템 보완을 해서 공관장의 결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다음 국회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한지수 양, 지난번에 유 장관께서 지시를 하셔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가석방했지요.

**○정동영 위원** 지원팀이 현지에 즉각 가서 크게 도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석방도 되고, 109일 만에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지금 또 한 백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온두라스대사가 이 문제에 좀 발 벗고 뛰어다니도록 독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추가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추가 보고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그때 온두라스의 강영희 씨인가 하는 분이 주한대사로 임명됐다가 왜 취소가 됐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온두라스 국내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대통령이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분이 됐으면 많이 온두라스와 이렇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그분의 사위를 임명을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어쨌든 유 장관께서 조사팀도 보내고 해서 가석방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속히 재판이 열려서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재외국민 보호 죽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 재외국민들,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사고가 나는 경우에 '정말 국가가 이런 거구나. 국가가 옆에 있구나' 이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박재형 씨라고 사이판에 관광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총격사건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총격 사고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동영 위원** 하반신 마비로 있는데, 얼마 전에 사이판 지사가 우리 영사 앞으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런데 그냥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기업에서 모금을 장려 중이다. 굉장히 성의 없는 공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이판은 인구가 7만 얼마인데, 한국 관광객이 작년에도 10만이 훨씬 넘고 요새도 매달 1만 명 이상씩 간단 말이지요. 한국 관광객이 뿌린 돈만 해도 수억 불인데 이런 총격사고로 숨진 희생자에 대해서 지금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재정상의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주겠다. 이런 대답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관광 수입이 사이판 재정의 3분의 1이 넘는데, 그중에 또 한국 관광객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외교부장관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사이판 정부에서도 좀더 성의를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촉구를 좀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 않아도 지난 3월 중순에 저희 외교부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관광청장을 면담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계속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인터넷에도 편지를 올렸는데 외교통상부에다가 아마…… 글쎄요, 대화 중에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터넷이나 언론에다 호소하라.' 이렇게 했다고 분격하는 글을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야 그렇지만 낯설고 물설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데 가서 이런 총격사고 같은 것 나면 의지하는 데가 우리 영사고 대사관이고, 그럴 때 '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가 옆에 있다. 정부가 있다.' 이걸 느낄 수 있게, 이것도 말하자면 시스템 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물론 지금 전보다 콜센터라든지 등등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유 장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박재형 씨 문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다시 한번 사이판 정부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끝났고요.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이……

송민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이지요?

**○송민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문학진** 하시지요.

**○송민순 위원** 아까 독도 관련돼서 외교부 조직의 예산하고 조직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확충을 한번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관제를 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이것도, 이게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인력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 이 계기에 각별하게 챙겨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그렇고 보면 섬에 대한, 소위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섬에 대한 선점과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하고 다르고, 제가 지금 외교장관님 생각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것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용어, 정의, 이론,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필요하면 문서로 정리해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것을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법상 무주물선점하는 것과 국제법에서 지금 국제관행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외교부가 지금까지 써 온 '실효적 지배'의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돼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 입장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돌려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지금 삼호드림호 같은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을 외교장관께서 국회의원 질문이 나오면 그냥 적절히 피해 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많이 논란을 일으킬수록 또 더더욱이 우리 해군이 추적을 해서 가서 마치 잡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할수록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인질을 잘 구해 내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군 파견해서 잡으러 가는 것처럼 하고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논란하고 떠들고 하는 것이 협상을 해서 이 사람을 풀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이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교부 기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가급적 보도를 하지 않도록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협조를 해 왔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로 관심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상황을 설명을 미리 해서 이런 많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전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소관 법률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손숙미·임두성·유기준·김춘진·이한성·안홍준·유재중·유성엽·김성수·김성태·이애주·손범규·김정훈·심재철 의원 발의)

**5.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6.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7.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6시24분)

**○위원장대리 문학진** 의사일정 제4항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

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법률안 1건과 동의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의 비준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의 강화,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규정에 따라서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즉, IRENA가 설립되고 조직 구성, 재원조달 방안 등 이행체계가 확정됩니다.

둘째, IRENA의 주요 기능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정보 수집과 연구, 기술협력, 정책자문, 인력육성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셋째, IRENA의 주요 조직으로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총회는 기구의 최고기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사무국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에스토니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에스토니아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고자 양국 기업들의 상대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국이 자국세법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적 관할권에 기초하여 투자국(거주지국)에 포괄적인 과세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과세대상 소득별로 투자유치국(소득원천지국)에서의 과세여부, 제한세율 등을 규정하여 양국 간 과세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투자국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 발효 시 이중과세 부담이 경감되어 양국 간 인력과 자본이동의 활성화와 투자 증진이 예상되며 동 협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으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이중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대·보호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 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국민은 기본적으로 5년간 근로지국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둘째, 협정 상대국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사람은 동 가입기간과 자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 충족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셋째, 연금의 지급 및 해외송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오스트리아 국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동 협정 발효 시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이 확대·보호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 기대되며, 동 협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오니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다음은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1건의 법률안과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신상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국에 파견하는 긴급구호대 중 보건의료활동을 담당하는 의료진을 포함한 의료지원체계를 재난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운영함으로써 재난 발생국에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감안할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현행 법률과의 관계, 예산과의 관계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간 긴급의료구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법률 규정의 미비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실적인 문제는 예산과 제도 운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동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는 법률체계에 맞게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해외긴급구호대 중 다른 구호대원과는 달리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의료구호 요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률의 개정 없이도 예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 연후에 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정식 설립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의 이용,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143개 서명국 중 2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후 30일이 경과되어야 하는바, 동 규정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비준동의안이 규정하고 있는 서명국의 규모,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및 예산의 규모를 살펴볼 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중추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규정에 대하여 143개국이 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비준국이 11개국에 그치고 있고, 예산의 확보와 함께 다른 나라의 비준 상황을 함께 감안하여 조기 비준의 이익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 비준동의안의 비준에 있어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비준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분담금과 분담금을 부담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며 필요한 혁신 기술에 대한 자문지원을 받는 등의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지역기술센터 또는 사무국 등의 유치를 위하여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9년 이후 정부는 자발적 기여금 형식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으나, 동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비준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비준이 이루어진 이후에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재생에너지기구와 APP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기구들 사이에 사업의 중복이 발생되고 있는바,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가입에 즈음하여서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입니다.

동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에스토니아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협약의 체결을 통해 기업 진출 및 상호 투자는 양국 간에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조약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고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해 양국 간에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비준동의안 역시 헌법 규정에 따라서 그 비준에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협약은 1999년에 가서명되었으나 10년이 경과하도록 그 비준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협약 문안이 가서명 당시의 표준에 머물러 오늘날의 준거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바, 우리 정부가 정식 서명 이전에 동 협약의 문안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오스트리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에 진출한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국민의 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비준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파견기간 중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 시 우리 근로자가 양국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오스트리아의 법령상 우리 국민이 오스트리아의 질병·재해와 관련된 공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정문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바, 이처럼 협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고, 향후에 체결될 사회보장협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문학진**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정의화 위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세한 것은 소위에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그냥 '의사'로 돼 있는데 말씀이지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공을 써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해가 다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나 국립의료원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의사들이 제대로 그 분야별로 돼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정동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실랍니까?

**○정동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문학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 1건과 3건의 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경필 위원, 송영선 위원, 신낙균 위원, 권영세 위원, 황진하 위원, 김충환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20인)**

| | | | |
|---|---|---|---|
| 구상찬 | 권영세 | 김충환 | 남경필 |
| 문학진 | 박상천 | 박선영 | 박주선 |
| 박 진 | 송민순 | 송영선 | 신낙균 |
| 이범관 | 이상득 | 이회창 | 정동영 |
| 정의화 | 정진석 | 진 영 | 황진하 |

**○청가 위원(2인)**

윤상현 홍정욱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구희권 |
| 전문위원 | 권기원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통상부

| | |
|---|---|
| 장관 | 유명환 |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위성락 |

| | | | |
|---|---|---|---|
| 기 획 조 정 실 장 | 임 | 재 | 홍 |
| 동북아시아국장 | 장 | 원 | 삼 |
| 개 발 협 력 국 장 | 설 | 경 | 훈 |
| 재외동포영사국장 | 백 | 주 | 현 |
| 국 제 경 제 국 장 | 김 | 경 | 수 |
| 북핵외교기획단장 | 조 | 현 | 동 |
| 조 정 기 획 관 | 최 | 연 | 호 |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 사임위원 | 보임위원 | 교섭단체 | 연월일 |
|---|---|---|---|
| 김충조 | 문학진 | 민주당 | 2010. 3. 10 |

**○소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 사임위원 | 보임위원 | 소위원회 | 교섭단체 | 연월일 |
|---|---|---|---|---|
| 송민순 | 이미경 | 법안심사소위원회 | 민주당 | 10. 4. 7 |
| 이미경 | 송민순 | 외교통일전략 및 역량강화소위원회 | | |
| - | 이광재 | 청원심사소위원회 | | |

**○의안 회부**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 2010. 2. 22 정부 제출)

이상 2월 23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0. 3. 11 정의화·김을동·박상은·이종혁·이명수·조경태·신학용·박상돈·황영철·홍정욱·남경필·송민순·장제원 의원 발의)

3월 12일 회부됨

**인도적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

(2010. 3. 15 송영길·전병헌·우제창·문학진·이찬열·조경태·김우남·송훈석·양승조·홍재형·강성종·최영희·변재일·강운태·김재균·강기정·백재현·조배숙·박영선·최인기·강창일·김부겸·김영환·박지원·이광재·김재윤·전현희·우윤근·박은수·김유정·이명수·홍영표·박주선·이낙연·이종걸·유선호·이강래·박병석·이미경·김효석·조승수·김상희·조영택·김성곤·권영길·최재성·원혜영·신건·곽정숙·서갑원·김동철·박선숙·홍희덕·장세환·전혜숙·정동영·최규식·신낙균·정장선·김진표·최문순·오제세·신학용·강기갑·백원우·조정식·강봉균·안규백·김희철·김진애·문희상·안민석·이윤석·이성남·유성엽·김춘진·이시종·김성순·최규성·주승용·김충조 의원 발의)

3월 16일 회부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0. 3. 29 이찬열·강창일·김영진·김재윤·김혜성·박기춘·송민순·송영길·신학용·오제세·원혜영·유기준·이성헌·장세환·조배숙·최영희·최재성 의원 발의)

3월 30일 회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2 정부 제출)

4월 5일 회부됨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정리 촉구 결의안**

(2010. 4. 5 강창일·박영선·양승조·우윤근·최재성·김재윤·신건·유성엽·정동영·김우남·안규백·오제세·김진애·김성곤·박선숙·강기정·이찬열·이계진·김동철·이성헌·최문순·홍희덕·이경재·이병석·박상천·노영민·이강래·조배숙·우제창·백재현·전혜숙·변재일·이석현·천정배·전현희·김성순·최규성·김부겸·전병헌·조영택·홍준표·홍사덕·황우여·이인기·김충조·박은수·박주선·장세환·박지원·김영진·이미경·원혜영·김춘진·추미애·김상희·최영희·조정식·박기춘·정범구·조경태·신낙균·이윤석·신영수·강성천·차명진·이성남·김재균·정장선·유원일 의원 발의)

4월 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

(2010. 3. 4. 송민순·강용석·강운태·강창일·고승덕·김동철·김부겸·김성순·김세연·김영진·김영환·김재균·김재윤·김춘진·문학진·박은수·박주선·서종표·송영길·신낙균·안민석·양승조·이석현·이성남·

이윤석 · 이찬열 · 장세환 · 전병헌 · 전혜숙 · 조경태 · 조배숙 · 최문순 · 최영희 의원 발의)

3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10. 3. 18 신낙균 · 홍영표 · 신학용 · 송민순 · 박선숙 · 박은수 · 김영진 · 조배숙 · 김성곤 · 이화수 · 김혜성 · 조영택 · 유성엽 · 이명수 · 박주선 · 이미경 · 문학진 · 정동영 · 양승조 · 김재윤 · 유원일 · 조승수 의원 발의)

3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사(義士) 안중근 장군 유해 발굴 및 송환 촉구 결의안**

(2010. 3. 23 박상은 · 김을동 · 조진래 · 백성운 · 김정훈 · 정의화 · 신영수 · 이명수 · 김재윤 · 이정현 · 김무성 · 김용구 · 성윤환 · 장세환 · 안형환 · 강길부 · 고흥길 · 강명순 · 이용경 · 김재경 · 이애주 · 최영희 · 홍일표 · 정해걸 · 진성호 · 황우여 · 김기현 · 유성엽 · 정진섭 · 임영호 · 김성곤 · 김금래 · 한선교 · 김정권 · 유기준 · 강창일 · 홍영표 · 김성태 · 이윤석 · 유정복 · 이한성 · 김영진 · 허원제 의원 발의)

3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